

번호 17-9

제 목	국문	인공수정 시술과 의료인의 연구의 자유				
	영문	The practice of ART and Physician's freedom of Research				
저 자 및 소 속	국문	전효숙, 이인영 ¹⁾ , 한동관 ²⁾ , 손명세 ³⁾ 연세대 대학원 의료법윤리학과,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¹⁾ ,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 ²⁾ ,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³⁾				
	영문	Hyo Sook Jeon, In Young Lee ¹⁾ , Dong-Kwan Han ²⁾ , Mongsei Sohn ³⁾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Pediatrics,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²⁾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³⁾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신의학 기술로서 인공수정 분야가 많은 불임 부부들에게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반면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윤리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평가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 가운데 인공수정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과 시술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있어 그 연구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공수정의 시술 방법과 현황을 살펴본 후 이 자료와 관련 문헌을 통해 인공수정으로 제기된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한다. 분석된 내용 중에서 의료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영국 및 프랑스등 이미 제정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공수정과 관련된 입법활동을 비교 고찰한다.

3. 연구 결과

인공 수정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문제들 가운데 의료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제들은 다음 두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 정자, 난자의 매매로 인한 상업화와 기증자 선정문제를 포함한 정자 및 난자은행의 관리, 운영의 문제이다.

둘째, 수정란 조작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는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수 있다.

- 인공수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 수정란의 손상, 파기의 문제
- 수정란의 사용에 관한 제공자의 동의 문제
- 유전자 조작(복제 및 실험)문제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나라의 입법활동을 비교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자, 난자의 매매에 대해 독일, 프랑스에서는 매매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인간의 수정 및 발생에 관한 관할 관청을 설치하여 그 기관의 감독하에 이뤄지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윤리적 물음에 대해 문제제기는 이뤄지고 있으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현재 이에 대한 입법정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수정란 조작과 관련하여 독일, 프랑스에서는 산업, 상업, 연구 또는 실험의 목적으로 수정란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에 있어 제공자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최근 인간 배아의 복제 및 실험을 허용했으며 미국도 잉여수정란에 한 해서 실험 및 복제를 허용했다. 이렇듯 수정란 조작은 의료인의 기술상의 자유와 관련해서 치료 목적의 경우라면 그 의학적 유용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확실한 한계설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4. 고찰

각국마다 인공수정 시술에 관해 의료인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억압되기 보다는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공수정 시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윤리적 적용에 부합하면서 의료인에게 연구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적절한 한계설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한계설정에 있어 전문가 집단과 시민들의 설문 조사 및 의견 수렴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다른 입법례와 비교고찰하여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